

시론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이라는 국토양극화를 막기 위해 남부권 중심 신성장지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다. 지난주에 전남도를 비롯한 남부권 5개 시·도에 3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공역협의체'가 처음으로 전남에서 열렸다. 올해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다.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섬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K-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문화·예술' 특화지구로, 섬진강을 끼고 있는 남부권은 '헬스·휴양' 특화지구로, 부산을 거점으로 둔 남부권은 '해양·문화' 특화지구로 만드는 복안이다. 영·호남의 관광 자원을 광역 단위로 개발해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전남은 넓은 바다와 해안선, 고유문화를 간직한 섬, 유네스코 자연유산 갯벌 등 천혜의 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체 사업의 43%인 56개 사업 1조3천2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남이 주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해남 수상공영장, 추포도 음식관광테마자원화사업 등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절실하다

1천488억원 규모의 선도사업 5건이 먼저 반영돼 사실상 남부권 사업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남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보성 차밭, 여수 바다, 신안 섬, 진도 민속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오히려 남해안종합개발과 무엇보다 그동안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추진과정을 볼 때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정확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해안개발과 남해안관광벨트에 대한 연속성에 관한 비판이다. 남해안선벨트 시범사업, 동서통합지대 조성,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발굴성 사업인 아닌 이제 남해안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문가들은 사업 연속성과 효율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관된 목소리이다.

남해안의 섬 개발에 4개 부처(국토부·행안부·해수부·문체부)가 섬 관광 활성화 추진협의체(2019년 2월)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이 전남·경남·부산의 남해안 공역지자체간에 체결되며 이어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수부·전남·경남·부산, 2023년 2월),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협약 체결(전남·경남, 2023년 4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2023년 5월) 등 남해안권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연륙·연도교 등 SOC 정비·확충에 대한 여러 남해안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문체부는 광역관광개발, 관광 마

케팅, 크루즈관광 활성화 등, 해수부는 크루즈 접안시설, 항만, 해양치유단지 등, 환경부는 국립공원 관리, 환경영향평가, COP33 유치 등 행안부는 섬 발전 및 특색화 등 도서종합계획의 남해안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남해안을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포르 센토사', '멕소코 칸쿤'과 같은 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처간의 다양한 남해안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실제 성과를 내는데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처럼 해양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활용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남해안의 기적'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신성장축으로 남해안 벨트가 작동되도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를 제도개선과 추진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 거점인 남해안권 SOC, 관광, 해양 등 체계적인 종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안의 SOC+관광+해양+섬 등을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행안부,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므로, 세관금개발청과 같은 총괄 컨트롤타워인 종합적인 개발청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남해안 종합개발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설립되도록 총선 공약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남해안벨트 출마자의 합동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반도체 벨트와 더불어 남해안벨트 대한민국의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영역이다.

社說

'백약이 무효'라는 전남의 인구절벽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각종 관련 정책에도 더욱 가팔라진 전남의 인구절벽을 지적하는 것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 2017년 190만명 붕괴 이후 7년만에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180만명까지 붕괴됐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인민국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또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1억원의 출산지원금, 출입국인민관리유치, 전남형 만원주택 신축 공급 등을 추진한다.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고 청년·이민 맞춤형 시책 강화 등 인구 유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물론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 실현 등 정부 차원의 방안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3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79만8천45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만5천629명이 빠졌다. 22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신안군 뿐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13만9천14명(63.3%)으로 전월 대비 2

천74명 줄었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18만4천952명으로 10.3%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47만4천469명으로 26.4%에 달했다. 도내 5개 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와 무안군을 제외하고 16개 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2004년 200만명 선이 무너졌다. 그 뒤로 190만 명까지는 13년이 걸렸고, 180만명 붕괴까지는 7년만이다.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시무식을 통해 "도민과 함께 '세기가 주목하는 전남'이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 사람이 모여드는 행복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눈앞에 닥친 인구 문제부터 절실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전국 최초로 3급 상당 인구청년인민국으로 격상해 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인천의 재외동포청의 사례를 들며 이민청 유치에도 전력하는 모습이다. 인구가 줄면 미래가 없다. 지금 특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발해야 한다.

광주 첨단산단도 '반값아침'...만족도 높이는 노력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반값아침'을 지원, 호응을 얻고 있다. 시중가보다 50% 저렴한 값(2천~3천원)에 식사를 제공하는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사업'(간편한 아침 한 끼)이 그것으로 매일 완판될 정도다. 지난해 3월 말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개소한 하남산단점은 12월까지 1만9천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팔았다. 하루 평균 102명이 이용한 것이다. 광주시가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2호점을 열었다. 이 곳에서는 월·금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김밥, 컵밥, 샐러드 등의 메뉴로 100명 분을 판매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이다. 일찍 출근하는데다 혼자 살고 있어 끼니를 건너뛰는 근로자들이 많다. 조식지원원은 개인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근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고밀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소확행' 정책이다.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천원의 아침밥'도 광주시가 지원을 보태 자리매김했다. 학생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음식이 동 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침은 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하루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거르면 안 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모든 산업단지에서 조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통한 노사상생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든든한 한끼다. 지역사회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올해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 수월할 것이다.

하남산단 시범 운영은 큰 성공이다. 시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민생 시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산단으로 속히 확대하고 메뉴의 다양화도 고민해야 한다. 1일 판매량을 늘리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수요 조사로 만족도를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기고



김승애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전남도 공간정보시스템이 나아갈 방향

데이트하고 그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효과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민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그 자료는 또 다른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간정보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연결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카카오, 티맵 등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공간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고객과 제품서비스를 연결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아마존은 자신의 플랫폼과 물류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외부의 힘을 빌려 상품의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었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공간정보시스템 역시 이들 플랫폼 기업들처럼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 몸집과 가치를 키워나가야 한다. 새로운 데이터를 또 다른 수요자가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시스템은 단순히 지도정보만 제공해서는 안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축적된 공간정보 위에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정보들을 꾸준히 쌓아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생겨날 것이다.

전남도는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J-Tas,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에 걸림돌이 되었던 보안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논의가 고해상도 영상지도와 대축적 지도 등의 공개 범위 확대로 이어진다면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 수요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공간정보 산업은 교통, 도시계획, 안전, 재난, 환경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최신 AI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해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 효율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시스템이 가지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발전해 나간다면 새로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국가 발전과 기업의 창인으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가공간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민간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민간에 제공된 국가공간정보가 민간의 아이디어와 합쳐져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예전에는 '플랫폼(platform)'하면 흔히 기차를 타고 내리는 기차역을 먼저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에서의 플랫폼의 개념은 고유의 가치역이나 승강장이란 개념에서 크게 확장됐다. 그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가치교환이 일어나고 거래가 발생하는 곳, 즉,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을 의미한다.

컴퓨터 시대를 선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은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지는 바람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또한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공간정보시스템은 공공 플랫폼으로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단순한 공간 정보만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로 한정해서는 발전해 나갈 수 없다. 미래 세대의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일보해야 하는 이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업

더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상 속 깊이 스며든 검은 유혹 '마약'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로 조속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약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이미지와 위험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처음부터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마약사범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강화로 재투약을 막는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약은 정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정광수·정홍경총서 경비안보과>

독자투고

마약 투약 기사는 인터넷 검색이나 신문, TV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는 3%에서 8%로, 60대 이상은 11%에서 25%로 크게 증가했다. 직업, 연령층 구분없이 범죄자가 늘어난 것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이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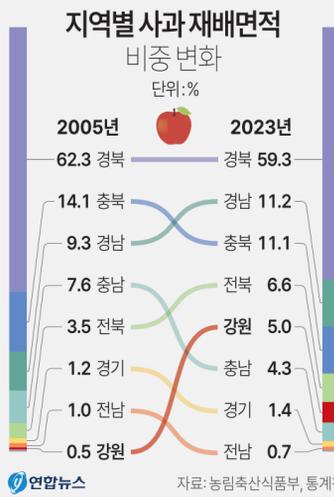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금사와 막는다...계약재배물량 세 배로·광원 재배지 2천ha 조성

정부가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각각 세 배, 1.5배로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강원도에 사과 재배지를 2천ha(헥타르·1만㎡)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잦은 호우에 병해까지 번지면서 사과와 배 생산이 약 30% 감소해 도매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의 경우 연평균 1%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재배면적을 2030년 3만3천ha(여의도의 11배) 이상으로, 지난해(3만3천789ha)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사과 생산은 5만t(톤) 이상으로, 평년(49만t)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각각 5만t, 4만t 수준에서 2030년 15만t, 6만t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2030년 예상 생산량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통해 2030년에는 명절 수요의 50%(12만t 중 6만t), 평시 수요의 25%(37만t 중 9만t)를 각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